

이헌재 부총리, “내년은 벤처 부활 원년 될 것”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1월 18일 “내년은 벤처가 다시 활성화되는 원년이 될 것”이라며 벤처부 재현에 대해 강한 의지를 밝혔다.

이부총리는 이날 서울 외신기자클럽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중소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각종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부총리는 벤처 활성화를 위한 코스닥시장 활성화를 비롯해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 자금지원 확대, 패자부활 시스템 구축 등의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현행 보증·대출 이외에 투자방식의 자금지원을 병행함으로써 중소기업과 투자위험을 공유하고, 이를 위해 중소기업 전문 신용정보회사(CB) 설립 등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단기 위주의 자금지원을 중장기 위주로 적극 유도하되 부실 중소기업을 연명시키는 정책은 쓰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자부, 산업기술자문단 2차사업 실시

산업자원부(장관 이회범)는 산업현장에서 중소기업들이 겪는 기술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공과대학 교수진과 연구소의 연구원 등 기술 전문가들이 중소기업에 대해 지원하는 ‘중소기업 기술자문사업’ 2차년도 사업을 진행한다고 11월 21일 밝혔다.

이 사업은 현직 공대교수 2800여 명이 참여하는 대학산업기술지원단(UNITEF)과 퇴직교수와 연구원 등 900여 명이 참여하는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KOFST)의 전문인력을 활용해 중소기업에 대한 1대1 기술자문 지원을 해주게 된다. 사업형태는 개별 중소기업을 1인이 전담, 애로기술 및 핵심기술 수요를 포괄적으로 지원토록하는 1사 1전담 멘토지원과 기술 아이디어나 애로기술 등을 6개월 이내에 프로젝트 수행을 통해 해결하는 단기 애로기술 지원의 2가지다. 정부에서는 최대 2000만원 한도로 75%까지 비용을 지원한다.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이나 전·현직 대학교수와 연구원은 각자 또는 컨소시엄을 구성, 사업신청서를 작성해 12월 3일까지 산업기술지원단 홈페이지(<http://www.techmentor.or.kr>)를 통해 등록 신청하면 된다.

산자부, 대·중소기업 협력사업 정책자금 지원

대·중소기업간 협력사업 추진시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자금을 지원할 경우 정부도 동일한 규모의 정책자금을 지원하게 된다. 산업자원부는 산업기반자금의 30%를 대·중소기업 협력사업에 지원키로 하고 산업기반자금 운영규정을 개정, 고시했다.

이에 따라 기술개발, 설비투자, 인력양성, 품질향상, 마케팅 등 대·중소기업 협력사업 추진시 대기업으로부터 소요자금의 50%를 지원받는 중소기업은 나머지 50%를 업체당 최고 50억원까지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대출받을 수 있게 됐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이 대출하는 대·중소기업 협력자금은 신용대출을 위주로 하며 금리는 4.9~6% 수준이다.

또한, 대·중소기업 협력자금 지원에는 기업은행도 적극 참여키로 하고, 대규모사업 등 정부 재원이 부족한 경우 대출을 지원하게 된다.

한편, 협력 중소기업에 자금을 대출하고자 하는 대기업은 대·중소기업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설립된 기협기술금융을 통해 대출 받을 수도 있다. 이 경우 대기업은 기협기술금융을 통해 자금의 상환을 보증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으로 협력 중소기업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